

글로벌 산업기술 혁신 예산 30% 증액 819억

산업부, 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정부가 올해 글로벌 산업기술협력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연구개발)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는 ‘2021년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22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 세계적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전년(630억원) 대비 30% 증액한 819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이 중 신규 예산은 26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예산 최대규모… 신규예산 267억 기업 세계진출 도모 신규사업 신설

주요국 대상 5개내외 연구기관에 산학연 중장기 공동 R&D 추진

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사업 유형을 신설했다. 그간 중점 추진한 정부 간 양자·다자 협력사업과 더불어 한국의 전략적 기술 확보나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거점형 공동 R&D’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영국 등 그린·디지털 강국을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구축한 14개국과 탄소중립 등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 선도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과 덴마크가 주도해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10개국과 추진에 합의한 그린분야 다자협력도 유럽 최

대의 공동연구 플랫폼인 ‘유레카’를 통해 지원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활용해 국내 산업체 등과의 중대형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거점형 사업’을 처음 도입한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5개 내외 연구기관을 선정해 국내 산학연과의 중장기 공동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 소부장 기업의 GVC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예를들면, 한국의 서울로보틱스와 독일의 BMW가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라이더 인지시스템’을 개발·지원(2020~2022년)해 기술개발 성공시 BMW 생산 공장에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 우수 기술도입이나 M&A 등 조기기술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기술 확보 시 해외기관과의 후속기술 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호혜적인 산업기술 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아세안국들과의 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에서 사업 안내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 국제농업개발기금 집행이사국 선출

농식품부, 개발도상국 빈곤퇴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18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C2 지역그룹(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IFAD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농업·농촌 개발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을 목표로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IFAD 창립회원국으로 지속적으로 기여를 확대해 지난 2018년 제11차 기금조성시 12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개발도상국 최빈층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보충협력기금사업으로 IFAD와 함께 개발도상국 소농을 위한 농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을 위한 공동워크샵, 글로벌 ODA 포럼

등을 개최하여 IFAD와 협력관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코로나19, 기상 이변 등으로 빈곤과 기아에 더욱 취약해진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이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식량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IFAD의 제12차(2022년~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을 전기(2019년~2021년) 대비 40.5%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확정했다. IFAD는 177개 회원국들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3년 단위로 국제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총회에서는 단독 임후보한 토고 출신 길버트 호웅보 현 총재가 투표없이 임기 4년의 총재로 재선출됐다. 호웅보 총재는 수락연설에서 임기 4년 동안 전 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의 빈곤과 기아 종식을 위해 기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443곳 적발

농관원, 설명절기간 제수용품 등 점검
209곳 거짓표시, 234곳은 미표시
적발건수 작년 642곳보다 올 3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가공·통신판매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명절기간이었던 지난 1월18일~2월10일까지 1만892개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443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209개소는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234개소였다. 전체 적발 건수는 전년 642개소 대

비 31.0% 감소했으나 비대면 판매업체의 적발 건수는 증가했다. 업체별 적발 비율은 음식점(32.9%), 가공업체(21.2%), 식육판매업(13.5%), 통신판매업체(6.1%), 중소형마트(2.5%)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적발 비율은 전년 54.8%에서 올해 32.9%로 21.9% 감소한 반면, 가공·통신판매업체 적발 비율은 전년 14.7%에서 올해 27.3%로 12.6% 증가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울산 소재 식육점은 한우와 미국산 갈비살을 혼합한 선물세트를 통신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2800만원 상당

을 판매했고, 광주 소재 육가공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목심을 양념육으로 가공해 마트에 납품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고 인터넷 통신판매시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아산 소재 한 뷔페식당은 미국산 칼로스쌀을 약9.2톤 구입해 밥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춘천 소재 한 반찬가게는 중국산 김치로 묵은지 등갈비찜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시장 예비후보 주말행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노원구 노원어린이도서관을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같은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 성북구 성북5구역을 방문해 노후 주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1만개 보급

스티로폼부표 사용금지 법령 추진

해양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친환경부표 5711만개를 보급한다. 또 올해 안에 양식장에서 스티로폼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총 398개 제품에 대한 친환경부표 인증과 단가계약을 완료하고 2021년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부표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해수부는 쉽게 부스러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개 중 스티로폼 재질 부표는 3941만개로 약 72%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올해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작년보다 3배 많은 친환경부표를 보급하기로 했고,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친환경부표 인증과 수협 단가계약을 완료했다.

어업인들은 친환경부표 종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해당 지역수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자체 35%)를 지

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의 완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친환경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친환경부표의 품질 향상과 지원 강화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4년까지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로화를 달성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부표의 경우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진청, 농촌 관광·경쟁력 강화 책 발간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탈출, 쉼과 치유’

농촌진흥청은 농촌관광 연구·정책 수립 방향 모색과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에서 만나는 일상탈출, 쉼과 치유’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농촌 치유관광은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자원을 활용해 스트레스

를 해소하고, 심신의 회복,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을 뜻한다. 책은 ▲치유가 필요한 사회 ▲일상에서 벗어나 치유를 찾아서 ▲농촌에서의 치유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여행의 치유 효과, 농촌에서의 치유, 비대면 시대와 농촌 치유관광, 치유를 위해 농촌에 오는 사람들이 찾는 것

등을 검토해 농촌 치유관광의 가능성과 준비할 사항을 제시했다. 또, 농촌 치유관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운영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규모 가족 단위, 랜선, 치유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책자는 전자책으로 발간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과 농사로(nongsaro.go.kr)에서 PDF로도 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